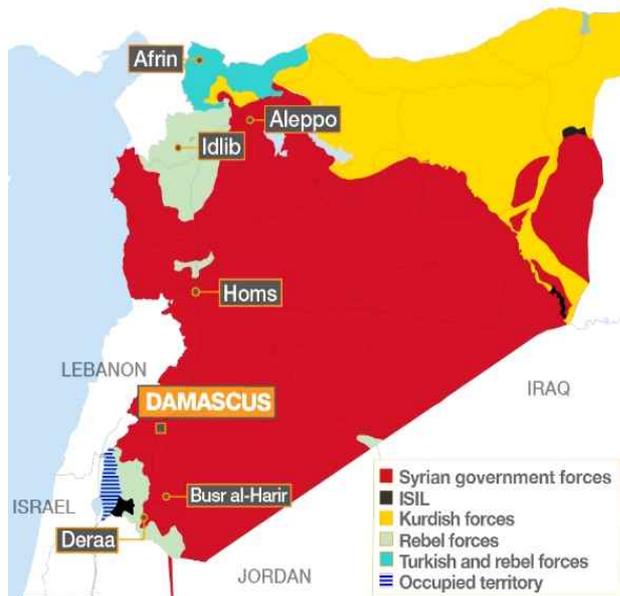




<p>신종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</p> <p>http://www.emerics.org/</p> <p>2018. 07. 13. 아프리카-중동</p>	「이슈&트렌드」
	<h2>시리아, 신규 재산법 주요내용 및 전망</h2>
	<p>작성 장윤희 연구원(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중동팀)</p>

- 시리아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신규 재산법(Law 10)을 적용할 예정임.
 - 2018년 4월 통과된 해당 법안은 재산 소유권자가 재건 지역 지정 이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사유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함.
 - 난민 등의 이유로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 가족, 친척 등이 대리인으로 소유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등록되지 않은 자산은 국가에 귀속됨.
 - 이후 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사유재산 등록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.
 - 재건 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이 상실되고 지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소유권 등록이 필수적임.
 - 2018년 7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인 다라를 수복하면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는 시리아 내 대부분 지역을 통제하게 되었으며, 이는 법 시행 추진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임.

그림 1. 시리아 내 세력 분포



주: 2018년 6월 26일 기준임.
자료: Al Jazeera

그림 2. 시리아 난민 현황(2017)



자료: Pew Research Center

- 신규 재산법이 반정부 세력에 대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외 피난민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.
- 아직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리아 정부가 반정부 세력 지역의 자산을 몰수하고 이 지역에 친정부 세력을 정착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됨.
 - 재건이 예상되는 하마, 홈스, 다마스쿠스 등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던 지역으로 다수 주민이 국내외로 피란하였음.
 - 또한 서류를 통한 소유권 증명이 어렵고 법이 정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은 실질적으로 시리아 피난민이 자산을 잃을 위기에 놓이게 함.
 - 소유권 증명에 필요한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전쟁 기간 동안 분실되어 증명 서류를 가진 난민은 소수인 것으로 알려짐.
 - 소유권 등록을 위한 대리인은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며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근거로 반정부 시위에 연계된 인물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.
- 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시리아 난민 귀환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며 난민 수용국 내 경제적, 사회적 문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시리아 국외 난민 대부분은 중동 지역 내 거주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 중에서는 독일(2017년 기준 약 53만 명)과 스웨덴(2017년 기준 약 11만 명)으로 다수 이주한 것으로 나타남.¹⁾
 - 2018년 7월 기준 유엔난민기구(UNHCR)에 등록된 터키 및 인근 아랍 국가 내 시리아 난민 수는 561만 명으로 터키에 355만 명, 레바논과 요르단에 각각 98만 명, 67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됨.
 - 레바논과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 수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면서 난민 송환, 국경 봉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.
 - 레바논 정부와 UNHCR 간 시리아 난민 송환 문제를 두고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2018년 6월 400명의 난민이 레바논을 떠나 시리아로 돌아감.
 - 시리아 정부군의 다라 공격으로 32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요르단은 국경을 폐쇄하고 시리아 난민의 유입을 막음.
 - 난민의 재산권 인정 여부가 본국 귀환과 직결되는 만큼 UN 주도 회담 및 주요국이 참여하는 시리아 사태 협상에서 관련 사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임. **EMERiCs**

참고자료

Al Jazeera, Oxford Analytica, Reuters, Pew Research Center, UNHCR, Al Bawaba 등

1) 2017년 기준 시리아 인구는 약 1,830만 명으로 추정됨.